

## I. 논의배경 - 독일 연방의회 아프가니스탄 관련 조사위원회 및 앙케트 위원회 구성

- 연방의회 제47차 본회의(7.7),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 진상 규명을 위한 제20대 연방의회 1차 조사위원회 출범<sup>1)</sup>
  - 기본법 제44조제1항<sup>2)</sup>에 따라 연방의회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관련 제20대 연방의회 1차 조사위원회 설치를 의결함. 조사위원회는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랄프 슈테그너 의원(사민당)임. 동 의원은 조사위원회는 책임자를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철수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를 규명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함.
  - 국정조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특정성 요청(Bestimmtheitsgebot)에 따라 조사대상 기간은 “2020년 2월 29일 미국이 탈레반과 도하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독일연방군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1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 30일”로 한정하고, 아프가니스탄 철수 관련 정보 교환 및 책임 규명에 관한 38가지 항목으로 특정함.
- 연방의회 제48차 본회의(7.8),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독일 외교, 안보 및 개발 협력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앙케트 위원회(Enquete-Kommission) 설치 의결<sup>3)</sup>
  - “독일의 미래 공동 개입을 위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교훈(Lehren aus Afghanistan für das künftige vernetzte Engagement Deutschlands)”이라는 명칭의 앙케트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 철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조사위원회와 달리 200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독일 외교, 안보 및 개발협력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동 앙케트 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 12명과 외부전문가 12명 총 2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마이클 뮐러 의원(사민당)임.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은 각각 3명의 의원을 임명하고, 녹색당·자민당 각 2명, 독일대안당·좌파당은 각 1명의 의원을 임명하고, 외부전문가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배정할 예정임.
- 논의사항
  - 독일 연방의회는 연방정부 부처별 소관에 따른 상임위원회(제20대 연방의회 25개 상임위 설치) 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특별위원회(Sonderausschuss, Kommission, Gremien)를 설치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제20대 독일 연방의회에서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II), 의회통제위원회(III), G10 심사위원회(IV), 앙케트 위원회(V), 선거위원회(VI)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1)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27-de-einsetzung-1ua-900528>

2) 제44조 ①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4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27-de-enquete-afghanistan-900510>

## II. 조사위원회 (Untersuchungsausschuss)

### ○ 개요

-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의원 4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함(기본법 제44조). 연방의회는 연방정부나 행정기관, 정치인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돼 증거수집 등 해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 항목을 특정한 후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야당이 정부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1949년 이후 현재까지 50여개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 1956년 제7차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 4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규정해(제45a조) 국방 분야 국정조사권은 국방위원회 전속 권한으로 위임하고 있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 ○ 법적 근거

- 국정조사권은 의원 4분의 1 요구로 설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회 내 소수자인 야당의 권리로 인정되자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과정에서 야당의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청도 중대한 문제로 등장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6.19. 「조사위원회법(Untersuchungsausschussgesetz)」이 제정되었음.

### ○ 구성 유형

- 독일 연방의회 조사위원회는 ‘다수조사’와 ‘소수조사’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다수조사’는 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1문 전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4분의 1 미만이 요청할 수 있지만 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는 조사위원회를 의미함.
  - ② ‘소수조사’는 기본법 제44조 제1항 제1문 후단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연방의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위원회를 의미함. 의원내각제 국가로 정부와 의회가 권력을 공유하는 현실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 내 소수 세력인 야당의 요구로 구성되는 ‘소수조사’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회 내 다수자인 집권여당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야당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 ○ 구성 절차 및 권한

-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교섭단체 또는 연방의회 의원 5% 이상으로 서명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연방의회 의사규칙 제76조제1항). 조사위원회 구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특정성의 요청(Bestimmtheitsgebot)을 충족<sup>4)</sup>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청서에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이는 법치국가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특히 ‘소수조사’의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대상을 변경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수를 결정함.
- 조사위원회는 증거조사에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증인소환이나 문서제출 요구 등에서 사법부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기본법 제44조 제2항). 조사위원회는 증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법적 지원

4) 독일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홍일선, 헌법학연구 제11권 제3호(2005)

과 행정지원 의무를 지니는 법원이나 행정관청을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기본법 제44조 제3항).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기본법 제44조 제4항), 조사활동이 종료되면 연방의회에 최종 업무보고를 한 후 조사 결과를 공표함. 조사결과에 대해 연정(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이한 경우 보고서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함께 적시함.

- 증거조사에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증인과 감정인에 대한 신문과 제출서류는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고, 2001년부터 조사위원회는 전문조사관(Ermittlungsbeauftragten)을 임명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 4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조사관을 임명해야 함. 이는 조사위원회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증거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sup>5)</sup>

○ 앙케트 위원회와 구별

- 조사위원회(Untersuchungsausschuss)와 앙케트 위원회(Enquete-Kommission)는 위원 구성, 조사대상 및 조사권한에서 차이가 있음.
- 첫째, 조사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하여 앙케트 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sup>6)</sup>
- 둘째,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을 특정해 공적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되는데 반하여 앙케트 위원회는 연방의회가 특정한 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를 연구하기 위해 설치함.
- 셋째, 조사위원회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신문과 제출 자료는 증거로서 효력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앙케트 위원회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제18대 및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조사위원회 구성 사례

	구성일시	조사 주제	위원 수
1	2014.3.20	미국 NSA(National Security Agency) 사건 조사 <sup>7)</sup>	8명
2	2014.	스페이드 작전(Operation Spade) 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한 데이터 조사 <sup>8)</sup>	8명
3	2015.	테러단체 “나치의 지하(Nationalsozialistischer Untergrund)” 조사 <sup>9)</sup>	8명
4	2016.2.25	Cum/Ex거래 구조화 모델 조사 <sup>10)</sup>	7명
5	2016.7.7	독일정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인식 조사 <sup>11)</sup>	8명
6	2018.3.1	2016.12.19. 베를린 브라잇사이드 광장 테러 조사 <sup>12)</sup>	9명
7	2019.1.30	연방국방부 외부 고문 관련 조사 <sup>13)</sup>	35명
8	2019.11.28	독일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준비 및 도입 관련 조사 <sup>14)</sup>	9명
9	2020.10.1	Wirecard사건 조사 <sup>15)</sup>	9명

5)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20. Wahlperiode, 59p

6)

<https://www.bpb.de/kurz-knapp/lexika/das-junge-politik-lexikon/321282/untersuchungsausschuss/#:~:text=Der%20Unterschied%20zur%20Enqu%C3%AAte%2DKommission,Expertinnen%2C%20die%20keine%20Abgeordnete%20sind.>

7)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8/ua/1untersuchungsausschuss>

8)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8/ua/2untersuchungsausschuss>

9)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8/ua/3untersuchungsausschuss>

10)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8/ua/4untersuchungsausschuss>

11)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8/ua/5untersuchungsausschuss>

### III. 의회통제위원회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 ○ 개요

-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보기관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기본법 제45d조제1항)로 소관 법률로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의회통제위원회법)」이 있음.
- 의회통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방정보기관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의회통제위원회법 제1조).
  - ① 연방헌법수호청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 연방내무부 소속으로 국내정보기관 업무
  - ② 군정보국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MAD): 독일 연방군 정보보안 업무
  - ③ 연방정보국 (Bundesnachrichtendienst, BND): 연방총리실 소속으로 해외정보기관 업무

#### ○ 구성

- 의회통제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연방의회는 총선 후 임기를 시작할 때 연방의원 중에서 의회통제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동법 제2조제1항), 위원 수, 조직 및 업무방식을 결정함(동법 제2조제2항). 위원들은 새로운 입법기간이 시작될 때 연방의회에서 의원 과반수 투표를 통해 선출됨.
- 제20대 연방의회 의회통제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합의했으나, 독일대안당 소속 위원이 선출되지 못해 공식으로 남겨져 있음. 위원장은 녹색당 소속 콘스탄틴 폰 노트츠(Dr. Konstantin von Notz) 위원임.

정당	위원	위원 수
사회민주당	울리 그뢰취 (Uli Grötsch)	4명
	세바스티안 하트만 (Sebastian Hartmann)	
	랄프 슈테그너 (Dr. Ralf Stegner)	
	마리아 리사 필러스 (Marja-Liisa Völlers)	
녹색당	콘스탄틴 폰 노트츠 (Dr. Konstantin von Notz)	2명
	이레네 미할릭 (Dr. Irene Mihalic)	
자유민주당	콘스탄틴 쿨레 (Konstantin Kuhle)	2명
	알렉산더 그라프 람스도프 (Alexander Graf Lambsdorff)	
기민/기사연합	로데리히 키제베테 (Roderich Kiesewetter)	3명
	알렉산더 호프만 (Alexander Hoffmann)	
	크리스토프 드 브리에스 (Christoph de Vries)	
좌파당	안드레 한 (Dr. André Hahn)	1명
독일대안당		-

#### ○ 운영

- 위원장은 적어도 세 달에 한 번(분기별 1번) 위원회를 소집하고(의회통제위원회법 제3조제1항), 회기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지 않는 한 5일로 함. 의회통제위원회 회의는 비밀로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비밀유지의무가 있음(동법 제10조).
- 의회통제위원회는 차기 연방의회가 의회통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때까지 해당 연방의회의 임기 종료 후에

12)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untersuchungsausschuesse/1untersuchungsausschuss>  
 13)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a12\\_Verteidigung/a12\\_Untersuchungsausschuss](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a12_Verteidigung/a12_Untersuchungsausschuss)  
 14)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untersuchungsausschuesse/2untersuchungsausschuss>  
 15)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untersuchungsausschuesse/3untersuchungsausschuss>

도 업무를 수행함(동법 제3조제3항).

- 의사정족수는 소속 위원 과반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의원 과반수임(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제3조).

○ 권한 및 의무

- 의회통제위원회는 정보기관 통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함(동법 제5조).

① 자료 열람 및 제출 요구

② 정보기관 관청의 모든 사무실에 대한 출입

③ 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질의 및 서면답변 요구

- 연방정부는 연방정보기관의 일반적 활동과 특히 중요한 사건(국내외 안보상황의 중요한 변화, 임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내사건, 정치적 논의나 일반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의회통제위원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의회통제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기타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할 의무가 있음(의회통제위원회법 제4조제1항).

- 연방정부는 정보접근 관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부 고유책임의 핵심 영역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보고와 요청의 이행 등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연방정부 관리책임자는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해 이를 설명해야 함(동법 제6조제2항).

- 의회통제위원회는 개별 사건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청문을 거친 후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문가에게 통제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동법 제7조제1항).

-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의회에 최소한 임기 중반 및 임기 말에 현재까지의 통제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음. 그 보고에서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가 위원회에 대한 의무, 특히 중요한 사건을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동법 제13조).

○ 지원조직 - 의회통제위원회 상임위원

- 의회통제위원회는 지원조직으로 의회통제위원회 상임위원을 두고, 동 상임위원이 수행하는 정기적 및 개별적 조사를 통해 업무 지원을 받음(동법 제5a조 및 제5b조).

- 상임위원은 의회통제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사안을 조사하고, 의회통제위원회 회의 및 연방의회 전체회의에 대한 보고를 준비하며, 의회통제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조사결과 및 기타 활동에 대하여 보고함.

- 상임위원은 의회통제위원회 제청에 따라 연방의회 의장이 5년의 임기로 임명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허용

- 2016.11.30. 창설된 의회통제위원회 상임위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사무처에 “정보기관 의회통제 부서(PK)”가 설치되었고, 현재 30명의 직원이 의회통제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IV. G 10 심사위원회 (G 10-Kommission)

### ○ 개요

- G 10 심사위원회(G 10-Kommission)는 기본법 제10조<sup>16)</sup>에 따라 보장되는 '서신의 비밀,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유지' 관련 정보기관의 기본권 침해를 통제하기 위해 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임. G 10 심사위원회는 어떤 지시에도 구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분야에서 연방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제한조치 허용 여부와 필요성을 매월 직권으로 결정함.<sup>17)</sup>
-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G 10-Gremium과 G 10-Kommission으로 나누어짐. 먼저 G 10-Gremium은 정보기관이 안보상의 이유로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실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1999년에 의회통제위원회로 수행 업무가 인수되었음.
- 이에 반해 G 10-Kommission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연방정보기관의 개별 조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sup>18)</sup> 1968년 제정된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의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은 제 14조에서 의회통제위원회를 규정하고, 제15조에서 G 10 심사위원회를 규율하고 있음.
- 정보기관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조건 하에서만 우편 및 전기통신 등에 대한 통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정보기관의 특정한 감시조치는 의회통제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연방정부는 모든 감청현황을 6개월마다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회통제위원회가 감청 집행, 방법 및 범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함.<sup>19)</sup>
- 원칙적으로 관할 연방 부처는 자신의 처분의 집행 전에 모든 통제조치에 대해 G10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G 10 심사위원회는 통제조치의 허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사전 승인한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으며, G 10 심사위원회가 명령된 제한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연방 부처는 즉시 그 명령을 해제해야 함(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의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제15조)

### ○ 구성 및 운영<sup>20)21)</sup>

- G 10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3인의 위원 등 총 5인으로 구성되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질의할 수 있는 5인의 대리위원으로 구성함. 최소한 3인 위원과 3인 대리위원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전 의회가 종료한 후에도 계속 재직함.
-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청문회를 거쳐 G 10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위원들은 연방의회 의원일 필요는 없으며, 위원들은 공적 명예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음.
- 제20대 연방의회는 경우 베르톨트 후버(Dr. Bertold Huber)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부위원장은 바이에른 주 의회 사민당 의원인 크리스티안 플리섹(Christian Flisek)이 맡고 있음.

16) 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전화의 비밀) ① 서신의 비밀, 우편 및 전기통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②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이나 안전보장에 이바지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과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이 심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17)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

18) 독일 정보기관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의회의 통제방안 연구, 김현우, 한국테러학회 제11권 제4호(2018.12), 197p

19)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20. Wahlperiode, 62p

20)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mitglieder-868160](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mitglieder-868160)

21)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aufgabe-868162](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aufgabe-868162)

위원	비고	연방의회 의원 여부
베르톨트 후버 (Dr. Bertold Huber)	위원장	X
크리스티안 플리섹 (Christian Flisek)	부위원장	X
라이너 풍케 (Rainer Funke)		X
키어스텐 뤼만 (Kirsten Lühmann)		X
안드레아스 슈밋 (Andreas Schmidt)		X

○ 권한 및 의무<sup>22)</sup>

- G 10 심사위원회는 연방정보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영역에서의 모든 제한 조치의 타당성과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위원회의 감독 권한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연방정보기관의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사용의 전체 영역에 미침.
- 위원회는 △연방정보기관으로부터 문의에 따른 정보 취득 △제한조치와 관련 있는 모든 자료, 특히 저장된 정보와 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 열람 허용 △모든 사무실에 대한 상시적 출입 허용이 보장됨.
-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비밀이며, 위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임기 종료 후에도 지득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 G 10 심사위원회와 의회통제위원회는 비밀 규정을 준수하면서 연방정보기관 감독 활동 관련 일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함.
- 위원회는 2020.12.3. 대테러규제의 기한 유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방정보기관의 특정 권한(예: 통신 또는 금융데이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의결권을 현재 무기한으로 보유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 6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의회통제위원회에 대해 보고해야 함.<sup>23)</sup>

22)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aufgabe-868162](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g10_kommission/aufgabe-868162)

23) <https://www.btg-bestellservice.de/pdf/10041000.pdf>, p.62

## V. 앙케트 위원회 (Enquete-Kommission)

### ○ 개요

- 앙케트 위원회(Enquete-Kommission)는 연방의회가 특정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총 31개의 앙케트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연방의회 의사규칙(Geschäftsordnung Deutscher Bundestag: GOBT) 제56조제1항은 “광범위하고 중요한 결정의 준비를 위해 앙케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연방의회 의원의 1/4 요청이 있으면 앙케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위원회는 연방의회 의원과 동수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고, 입법기가 끝날 때까지 최종 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다만, 상임위원과 같이 최종보고서가 연방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므로 앙케트 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연방의회가 채택하려면 다시 법안이나 동의안 형식으로 제출해야 함.<sup>24)</sup>

### ○ 앙케트 위원회 구성 연혁

연번	활동기간	주제
1	1971-1975	정신병학 (Psychiatrie)
2	1973-1978	헌법개혁 (Verfassungsreform) <sup>25)</sup>
3	1973-1977	외국 문화 정책 (Auswärtige Kulturpolitik)
4	1977-1981	여성과 사회 (Frau und Gesellschaft) <sup>26)</sup>
5	1981-1983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iken) <sup>27)</sup>
6	1981-1983	민주국가의 청소년 항쟁 (Jugendprotest im Demokratischen Staat) <sup>28)</sup>
7	1979-1983	미래의 원자력 에너지 정책 (Zukünftige Kernenergie-Politik) <sup>29)</sup>
8	1984-1987	유전공학의 기회와 위험 (Chancen und Risiken der Gentechnologie) <sup>30)</sup>
9	1984-1989	기술평가 (Technologiefolgenabschätzung)
10	1987-1990	에이즈의 위험성과 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 방법 (Gefahren von AIDS und wirksame Wege zu ihrer Eindämmung) <sup>31)</sup>
11	1987-1992	법정의료보험의 구조개혁 (Strukturreform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12	1987-1990	지구대기권, 대기 보호를 위한 예방조치 (Enquete-Kommission Vorsorge zum Schutz der Erdatmosphäre) <sup>32)</sup>
13	1991-1994	지구대기권, 대기 보호 (Enquete-Kommission Schutz der Erdatmosphäre) <sup>33)</sup>
14	1987-1994	미래교육정책 (Zukünftige Bildungspolitik - Bildung 2000)
15	1992-1994	역사의 재정비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결과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sup>34)</sup>
16	1992-1993	인간과 환경의 보호 (Schutz des Menschen und der Umwelt) <sup>35)</sup>
17	1995-1998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SED 독재 결과 극복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sup>36)</sup>

24)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20. Wahlperiode 60p.

25) <https://dserver.bundestag.de/btd/07/059/0705924.pdf>



18	1992-2002	인구변화 (Demographischer Wandel) <sup>37)</sup>
19	1996-1998	이단 및 정신적 집단 (Sogenannte Sekten und Psychogruppen)
20	1996-1998	경제와 사회 미디어의 미래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21	2000-2002	법과 현대의학의 윤리: 제1위원회 (Recht und Ethik der modernen Medizin: 1. Kommission) <sup>38)</sup>
22	1999-2002	세계 경제의 세계화 (Globalisierung der Weltwirtschaft) <sup>39)</sup>
23	1999-2002	시민참여의 미래 (Zukunft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sup>40)</sup>
24	2000-2002	세계화와 자유화의 조건 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Nachhaltige Energieversorgung unter den Bedingungen der Globalisierung und der Liberalisierung) <sup>41)</sup>
25	2003-2005	현대의학의 윤리와 법: 제2위원회 (Ethik und Recht der modernen Medizin: 2. Kommission) <sup>42)</sup>
26	2003-2007	독일 문화 (Kultur in Deutschland) <sup>43)</sup>
27	2010-2013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Internet und digitale Gesellschaft) <sup>44)</sup>
28	2010-2013	생명의 성장, 번영, 품질: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 방향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 - Wege zu nachhaltigem Wirtschaften und gesellschaftlichem Fortschritt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sup>45)</sup>
29	2018-2020	인공지능 -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잠재력 (Künstliche Intelligenz -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und wirtschaftliche, soziale und ökologische Potenziale) <sup>46)</sup>
30	2018-2021	디지털 산업에서의 직업훈련 (Berufliche Bildung in der digitalen Arbeitswelt) <sup>47)</sup>
31	2022-	미래 공동개입을 위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교훈 (Lehren aus Afghanistan für das künftige vernetzte Engagement Deutschlands) <sup>48)</sup>

26)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1987896\\_enquete1-199442](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1987896_enquete1-199442)

27)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2635465\\_enquete\\_6-199514](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2635465_enquete_6-199514)

28)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3114897\\_enquete\\_7-199532](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3114897_enquete_7-199532)

29)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2015969\\_enquete2-199444](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2015969_enquete2-199444)

30)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3293968\\_enquete\\_8-199568](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3293968_enquete_8-199568)

31)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3844661\\_enquete\\_9-199926](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3844661_enquete_9-199926)

32) [https://www.nachhaltigkeit.info/artikel/11\\_bt\\_ek\\_schutz\\_erdatmosphaere\\_659.htm](https://www.nachhaltigkeit.info/artikel/11_bt_ek_schutz_erdatmosphaere_659.htm)

33) <https://dserver.bundestag.de/btd/12/086/1208600.pdf>

34) <https://dserver.bundestag.de/btd/12/078/1207820.pdf>

35) [https://www.nachhaltigkeit.info/artikel/12\\_bt\\_ek\\_mensch\\_und\\_umwelt\\_660.htm](https://www.nachhaltigkeit.info/artikel/12_bt_ek_mensch_und_umwelt_660.htm)

36) <https://dserver.bundestag.de/btd/13/110/1311000.pdf>

37)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4078954\\_enquete\\_10-199968](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4078954_enquete_10-199968)

38)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113&id=1040>

39) <https://dserver.bundestag.de/btd/14/092/1409200.pdf>

40)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112&id=1040>

41)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enquete-12-inhalt-516534>

42) <http://webarchiv.bundestag.de/cgi/show.php?fileToLoad=116&id=1040>

43)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6242585\\_enquete\\_11-200166](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6242585_enquete_11-200166)

44) [https://www.bundestag.de/webarchiv/textarchiv/2010/28851941\\_kw09\\_de\\_enquete-201096](https://www.bundestag.de/webarchiv/textarchiv/2010/28851941_kw09_de_enquete-201096)

45) <http://webarchiv.bundestag.de/archive/2013/1212/bundestag/gremien/enquete/wachstum/index.html>

46)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weitere\\_gremien/enquete\\_ki](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weitere_gremien/enquete_ki)

47) [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weitere\\_gremien/enquete\\_bb](https://www.bundestag.de/webarchiv/Ausschuesse/ausschuesse19/weitere_gremien/enquete_bb)

48)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27-de-enquete-afghanistan-900510>

## VI. 선거위원회 (Wahlausschuss)

### ○ 구성 및 운영<sup>49)50)</sup>

- 기본법 제94조제1항<sup>51)</sup> 및 연방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제1문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 중 절반은 연방의회에서, 나머지 절반은 연방상원에서 선출함. 연방의회에서 임명할 재판관은 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선거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됨.
- 연방의회에서 선임되는 재판관은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연방의회는 비례선거의 원칙에 따라 의원 중 12인으로 구성되는 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선거위원회를 선출함(연방헌법재판소법 제6조제2항제1문). 선거위원회는 새로운 입법기가 시작될 때 구성되고, 각 교섭단체는 선거인후보명부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투표된 표의 합계에서 최고득표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명부에서 위원을 선출함(연방헌법재판소법 제6조제2항제2문).
- 선거위원회는 최소 8명의 위원의 득표를 얻은 사람을 연방의회가 임명할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해 본회의에 제안함(동법 제6조제5항). 동 후보자가 연방의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2/3 이상 및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수를 얻은 경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됨.
-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소속당	위원	위원 수
사회민주당	소냐 아이히베데 (Sonja Eichwede)	5명
	요하네스 페히너 (Dr. Johannes Fechner)	
	카트야 마스트 (Katja Mast)	
	롤프 뮈체니히 (Dr. Rolf Mützenich)	
	디어크 비제 (Dirk Wiese)	
녹색당	브리타 하셀만 (Britta Haßelmann)	2명
	레나테 쿨나스트 (Renate Künast)	
자유민주당	요하네스 포겔 (Johannes Vogel)	1명
기민/기사연합	알렉산더 도브린트 (Alexander Dobrindt)	3명
	토스텐 프라이 (Thorsten Frei)	
	안스가 헤벨링 (Ansgar Heveling)	
좌파당	-	-
독일대안당	파비안 야코비 (Fabian Jacobi)	1명
총		12명

49)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Wahlausschuss](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Wahlausschuss)

50)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20. Wahlperiode

51)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조직)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법관 및 그 밖의 구성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각각 2분의 1을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선출한다. 이들 구성원은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 및 이들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② 연방 법률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하며, 어떠한 경우에 그 결정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가를 정한다. 또한 연방 법률은 헌법소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소원수리절차를 정할 수 있다

## VII. 기타 특별위원회 (Gremien)

- 기본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Gremium gemäß Artikel 13 Absatz 6 des Grundgesetzes)<sup>52)</sup>
  - 기본법 제13조제1항은 주거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당국은 중대한 범죄행위 예방이나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주거의 감청을 위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함. 감청 행위는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으로 간주되므로 연방정부는 매년 연방의회에 감청장비의 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이를 통제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연방의회에 구성함.

소속당	위원	위원수
사회민주당	소냐 아이히베데 (Sonja Eichwede)	4명
	세바스티안 피들러 (Sebastian Fiedler)	
	울리 그뢰취 (Uli Grötsch)	
	카르멘 베게 (Carmen Wegge)	
녹색당	마셀 엠머리히 (Marcel Emmerich)	2명
	헬게 림부르크 (Helge Limburg)	
자유민주당	마누엘 회펠린 (Manuel Höferlin)	2명
	슈테판 토마에 (Stephan Thomae)	
기민/기사연합	잉그마 융 (Ingmar Jung)	3명
	안드레아 린트홀츠 (Andrea Lindholz)	
	악셀 뮐러 (Axel Müller)	
좌파당	안드레 한 (Dr. André Hahn)	1명
독일대안당	토마스 자이츠 (Thomas Seitz)	1명
총		13명

- 연방자금조달위원회 (Bundesfinanzierungsgremium)<sup>53)</sup>
  - 연방채무관리법 제3조에 따른 위원회로 독일 국가부채에 대한 의회 통제를 행사함. 연방재무부를 통해 독일 국가부채 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2010.1.1.부터 연방예산법(BHO) 제69a조에 따라 사법상의 기업 및 연방정부 참여 행정부서에 대한 연방정부 지분 현황 및 지분 관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연방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음.
  - 동 위원회는 2018.1.1.부터 구 금융시장위원회(Finanzmarktgrremium)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안정화기금법 (Stabilisierungsfondsgesetz) 제10a조 및 구조조정기금법(Restrukturierungsfondsgesetz) 제16조에 따른 의회 통제 기능의 일환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특별기금과 구조조정 특별기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연방재무부로부터 기밀보고를 받음. 연방자금조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서 활동하며 알게 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소속당	위원	위원 수
사회민주당	뵘케 에스다 (Dr. Wiebke Esdar)	4명

52)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2/kw27-de-wahl-bundesbeauftragte-antidiskriminierung-900522>

53)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bundesfinanzierungsgremium](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bundesfinanzierungsgremium)

	프랑크 융에 (Frank Junge)	
	토스텐 루돌프 (Dr. Thorsten Rudolph)	
	안드레아스 슈바츠 (Andreas Schwarz)	
녹색당	야밀라 쉐퍼 (Jamila Schäfer)	2명
	세바스티안 쉐퍼 (Dr. Sebastian Schäfer)	
자유민주당	오토 프리케 (Otto Fricke)	2명
	카슈텐 클라인 (Karsten Klein)	
기민/기사연합	플로리안 오스너 (Florian Oßner)	3명
	프리트츠 귄츨러 (Fritz Güntzler)	
	안드레아스 맛펠트 (Andreas Mattfeldt)	
좌파당	빅터 페를리 (Victor Perli)	1명
독일대안당	-	1명
총		13명

○ 선거법 개혁 및 의회업무 현대화 위원회 (Kommission zur Reform des Wahlrechts und zur Modernisierung der Parlamentsarbeit)<sup>54)</sup>

- 2022.3.16. 제20대 연방의회 총선 후 의원 수 증가에 대한 우려로 신호등연정 3당의 요청에 따라 연방의회는 선거법을 개혁하고 의회 업무를 현대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
- 제19대 연방의회에서도 선거법개혁위원회가 구성돼 △연방총리 임기제한, △연방의회 의석수 축소, △선거주기 변경, △투표연령 16세 하향 조정, △연방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대표 등의 주제를 논의해 2021.9.30.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2차례 회의를 끝으로 성과 없이 종료함.
- 제20대 연방의회에서도 개인화된 비례대표제의 원칙에 기초해 법정의원수를 기준으로 의원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양성의 평등한 대표성을 달성하며, 시민 참여를 위한 디지털화 가능성 등 의회업무의 현대화 등을 논의할 선거법 개혁 및 의회업무 현대화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함. 동 위원회는 제19대 연방의회에서도 쟁점사항이었던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입법기간 연장, 선거일정 통합 등에 대한 쟁점도 논의할 예정임.
- 2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3명의 연방의회 의원과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2022.8.31.까지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늦어도 2023.6.30.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소속당	위원	위원수
사회민주당	요하네스 페히너 (Dr. Johannes Fechner)	4명
	레니 브라이마이어 (Leni Breymaier)	
	에스더 딜허 (Esther Dilcher)	
	세바스티안 하트만 (Sebastian Hartmann)	
녹색당	울레 샤우스 (Ulle Schauws)	2명
	틸 슈테픈 (Dr. Till Steffen)	
자유민주당	콘스탄틴 쿨레 (Konstantin Kuhle)	2명

54) [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kommission-wahlrecht](https://www.bundestag.de/ausschuesse/weitere_gremien/kommission-wahlrecht)

	슈테판 토마에 (Stephan Thomae)	
기민/기사연합	니나 바켄 (Nina Warken)	3명
	안스가 헤벨링 (Ansgar Heveling)	
	알렉산더 호프만 (Alexander Hoffmann)	
좌파당	페트라 파우 (Petra Pau)	1명
독일대안당	알브레히트 글라저 (Albrecht Glaser)	1명
총		13명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회자문위원회 (Parlamentarischer Bei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sup>55)</sup>

- 제15대 의회부터 설치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회자문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국가 지속가능성 전략과 유럽 및 UN수준에서 독일 정부의 지속 가능성 정책에 대한 의회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 전문가 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연방의회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제19대 의회에서는 17명의 의원으로 구성했으나 제20대 의회에서는 3명이 증가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제 20대 의회 중반까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중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55)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20. Wahlperiode, 60p

〈참고자료 1〉 앙케트 위원회 구성 세부 내역(제12대~제20대)56)

입법기	주제	총 위원	의원구성	전문가	기간 a)시작 b)종료 c)회의개최 회수
제12대	지구대기권, 대기 보호 (Enquete-Kommission Schutz der Erdatmosphäre)	26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5 자유민주당 2	13	a) 1991.6.27. b) 1994.10.4. c) 131
	인간과 환경의 보호: 제1위원회 (Schutz des Menschen und der Umwelt)	26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5 자유민주당 2	13	a) 1992.3.18. b) 1994.6.20. c) 63
	역사의 재정비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독재의 결과 (Aufarbeitung von Geschichte und Folgen der SED-Diktatur)	27	기민/기사연합 8 사회민주당 6 자유민주당 2	11	a) 1992.3.19. b) 1994.6.15. c) 82
	인구변화: 제1위원회 (Demographischer Wandel)	27	기민/기사연합 9 사회민주당 6 자유민주당 2	10	a) 1992.11.4. b) 1994.3.9. c) 18
제13대	인간과 환경의 보호: 제2위원회 (Schutz des Menschen und der Umwelt)	24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2	a) 1995.6.21. b) 1998.6.22. c) 67
	인구변화: 제2위원회 (Demographischer Wandel)	24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2	a) 1995.6.29. b) 1998.9.29. c) 28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SED 독재 결과 극복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ss der deutschen Einheit)	24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2	a) 1995.6.30. b) 1998.6.3. c) 53
	경제와 사회 미디어의 미래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24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2	a) 1996.1.31. b) 1998.6.22. c) 46
	이른바 이단과 정신적 집단 (Sogenannte Sekten und Psychogruppen)	24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2	a) 1996.5.9. b) 1998.5.28.-29. c) 49
제14대	세계 경제의 세계화 (Globalisierung der Weltwirtschaft)	26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4	13	a) 2000.3.13. b) 2002.6.10.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c) 34
	시민참여의 미래 (Zukunft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22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3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1	a) 2000.2.14. b) 2002.4.25. c) 24
	인구변화: 제3위원회 (Demographischer Wandel)	22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3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1	a) 2000.2.14. b) 2002.4.25. c) 24
	세계화와 자유화의 조건 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Nachhaltige Energieversorgung unter den Bedingungen der Globalisierung und der Liberalisierung)	26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3	a) 2000.3.13. b) 2002.6.24. c) 65
	법과 현대의학의 윤리: 제1위원회 (Recht und Ethik der modernen Medizin: 1. Kommission)	26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2 좌파당 1	13	a) 2000.5.15. b) 2002.4.29. c) 37
제15대	현대의학의 윤리와 법: 제2위원회 (Ethik und Recht der modernen Medizin: 2. Kommission)	26	기민/기사연합 5 사회민주당 6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13	a) 2003.5.5. b) 2005.9.6. c) 42
	독일 문화 (Kultur in Deutschland)	22	기민/기사연합 4 사회민주당 5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11	a) 2003.10.13. b) 2005.6.27. c) 47
제16대	독일 문화 (Kultur in Deutschland)	22	기민/기사연합 4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1 녹색당 1 좌파당 1	11	a) 2006.2.13. b) 2007.11.12. c) 36
제17대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Internet und digitale Gesellschaft)	34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3 녹색당 2 좌파당 2	17	a) 2010.5.5. b) 2013.1.28. c) 20
	생명의 성장, 번영, 품질: 사회적 시장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 방향 (Wachstum, Wohlstand, Lebensqualität - Wege zu nachhaltigem Wirtschaften und gesellschaftlichem Fortschritt i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34	기민/기사연합 6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3 녹색당 2 좌파당 2	17	a) 2011.1.17. b) 2013.4.15. c) 31

제19대	인공지능 -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잠재력 (Künstliche Intelligenz -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und wirtschaftliche, soziale und ökologische Potenziale)	38	기민/기사연합 7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2 녹색당 2 좌파당 2 독일대안당 2	19	a) 2018.9.27. b) 2020.10.26. c) 25
	디지털 산업에서의 직업훈련 (Berufliche Bildung in der digitalen Arbeitswelt)	38	기민/기사연합 7 사회민주당 4 자유민주당 2 녹색당 2 좌파당 2 독일대안당 2	19	a) 2018.9.27. b) 2021.5.25. c) 36
제20대	미래 공동개입을 위한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의 교훈 (Lehren aus Afghanistan für das künftige vernetzte Engagement Deutschlands)	24	기민/기사연합 3 사회민주당 3 자유민주당 2 녹색당 2 좌파당 1 독일대안당 1	12	a) 2022.7.8.

56)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196186/46955658a1e3f5534db39134a6b67890/kapitel\\_08\\_10\\_enquete-kommissionen-data.pdf](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196186/46955658a1e3f5534db39134a6b67890/kapitel_08_10_enquete-kommissionen-data.pdf)



## 〈참고자료 2〉 So arbeitet der Deutsche Bundestag (p.58-63)

### ▸ Untersuchungsausschüsse und weitere Gremien

Außer den ständigen Ausschüssen kann – oder muss – der Bundestag eine Reihe anderer Ausschüsse, Kommissionen und Gremien bilden, die sich nach Zusammensetzung, Aufgabe und Arbeitsweise von den ständigen Ausschüssen deutlich unterscheiden.

Nach Art. 44 GG kann der Bundestag zur Untersuchung bestimmter Vorfälle einen Untersuchungsausschuss einsetzen; auf Antrag eines Viertels seiner Mitglieder ist er hierzu verpflichtet. Dies ist ein besonders wichtiges Minderheitsrecht, das vor allem von der Opposition zur Prüfung behaupteter Missstände in Regierung und Verwaltung bzw. behaupteten Fehlverhaltens von Politikerinnen und Politikern genutzt wird.

Die Rechte und das Verfahren des Untersuchungsausschusses sind im Untersuchungsausschussgesetz geregelt.

Die Antragsteller haben in ihrem Antrag das Beweisthema konkret und präzise zu beschreiben. Im Einsetzungsbeschluss bestimmt der Bundestag auch die Zahl der Ausschussmitglieder. Auf die Beweiserhebungen finden die Vorschriften über den Strafprozess sinngemäß Anwendung. Gerichte und Verwaltungsbehörden sind zur Rechts- und Amtshilfe verpflichtet. Als Beweismittel dienen insbesondere die Vernehmung von Zeuginnen und Zeugen, die Anhörung von Sachverständigen sowie die Beiziehung von Akten. Es besteht außerdem die Möglichkeit, Ermittlungsbeauftragte zu berufen; der Untersuchungsausschuss hat dazu jederzeit das Recht und auf Antrag eines Viertels seiner Mitglieder die Pflicht. Untersuchungsausschüsse müssen grundsätzlich in öffentlicher Verhandlung die erforderlichen Beweise erheben. Je nach Untersuchungsgegenstand findet die Zeugeneinvernahme jedoch häufig – zumindest teilweise – auch in nichtöffentlicher Sitzung statt.

Das Ergebnis fasst der Untersuchungsausschuss in einem Bericht an das Plenum zusammen. Wenn die Bewertung der Untersuchung zwischen Koalition und Opposition, wie meist, umstritten ist, enthält der Bericht ein Mehrheits- und ein Minderheitsvotum. Wiederum in Abhängigkeit vom Untersuchungsgegenstand kann es geboten sein, Teile des Berichts als Verschlussache einzustufen. Dieser Berichtsteil ist dann nur in der Geheimschutzstelle des Deutschen Bundestages einsehbar.

In der 19. Wahlperiode hatte der Bundestag drei Untersuchungsausschüsse nach Art. 44 GG eingesetzt: Am 1. März 2018 den 1. Untersuchungsausschuss zum Terroranschlag Breitscheidplatz in Berlin, am 28. November 2019 den 2. Untersuchungsausschuss zum Verhalten der Bundesregierung im Zusammenhang mit der Vorbereitung und Einführung der Infrastrukturabgabe (Pkw-Maut) und am 1. Oktober 2020 den 3. Untersuchungsausschuss zum Verhalten der Vorkommnisse in Zusammenhang mit dem inzwischen insolventen Zahlungsdienstleister Wirecard.

Von den Untersuchungsausschüssen sind die Enquete-Kommissionen zu unterscheiden, die der

Deutscher Bundestag zur Vorbereitung von gesetzgeberischen Entscheidungen über umfangreiche und bedeutsame Sachkomplexe einsetzen kann bzw. auf Antrag eines Viertels seiner Mitglieder einsetzen muss. Enquete-Kommissionen setzen sich aus Mitgliedern des Bundestages und externen Sachverständigen, die die gleichen Rechte wie die Abgeordneten haben, zusammen. Sie legen dem Bundestag bis spätestens zum Ende der Wahlperiode einen Bericht vor, der allerdings nicht wie bei den ständigen Ausschüssen mit einer konkreten Beschlussempfehlung an den Bundestag verbunden ist. Vielmehr müssen Empfehlungen einer Enquete-Kommission aus der Mitte des Bundestages oder von der Bundesregierung aufgegriffen und als Gesetzentwurf oder Antrag eingebracht werden, wenn der Bundestag dazu etwas beschließen soll. In der 19. Wahlperiode hatte der Deutsche Bundestag zwei Enquete-Kommissionen eingesetzt, die sich mit den Themenkomplexen „Künstliche Intelligenz –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und wirtschaftliche Potenziale“ und „Berufliche Bildung in der digitalen Arbeitswelt“ befasst haben.

Ein parlamentarisches Gremium besonderer Art ist der erstmals in der 15. Wahlperiode eingesetzte Parlamentarische Beirat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Seine Aufgabe ist die parlamentarische Begleitung der Deutschen Nachhaltigkeits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sowie der Nachhaltigkeitspolitik der Bundesregierung auf europäischer Ebene und auf Ebene der Vereinten Nationen. Der Parlamentarische Beirat begleitet u. a. Beratungen in anderen Gremien des Deutschen Bundestages, die eine nachhaltige Entwicklung betreffen, indem dem jeweils federführenden Ausschuss gutachtliche Stellungnahmen und Empfehlungen zur Beratung vorgelegt werden. Das Gremium, das auch zu Beginn der 20. Wahlperiode wieder eingesetzt worden ist und dem 20 Mitglieder angehören, hat dem Bundestag bis zur Mitte der Legislaturperiode Vorschläge vorzulegen, wie die Arbeit des Beirats noch effizienter ausgestaltet und wirksamer in die Öffentlichkeit getragen werden kann.

Nicht zuletzt als Folge des weiteren Aufwuchses der Mitgliederzahl des Parlaments hat der Bundestag zu Beginn der 20. Wahlperiode die im Bundeswahlgesetz nunmehr verpflichtend vorgesehene Kommission zur Reform des Wahlrechts und zur Modernisierung der Parlamentsarbeit eingesetzt. Bereits am Ende der 19. Wahlperiode war die Kommission erstmalig eingesetzt worden, konnte jedoch nur noch insgesamt zweimal tagen und über die Leitfragen der weiteren Arbeit beraten. Auf dieser Grundlage soll die Kommission in dieser Wahlperiode nun über Vorschläge zu einer effektiven Verkleinerung des Bundestages, über verfassungskonforme Vorschläge zum Erreichen einer gleichberechtigten Repräsentanz von Frauen und Männern im Bundestag, über die Modernisierung und Digitalisierung der Parlamentsarbeit sowie über eine Absenkung des aktiven Wahlalters auf 16 Jahre, eine Verlängerung der Dauer der Wahlperioden sowie die Begrenzung von Amts- und Mandatszeiten und eine Bündelung von Wahlterminen in Bund und Ländern beraten. Die Kommission besteht aus dreizeh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sowie der gleichen Anzahl an Sachverständigen und verfügt über zwei – paritätisch zu besetzende – Vorsitze. Sie hat dem Bundestag nach Vorlage eines Zwischenberichts bis spätestens zum 30. Juni 2023 einen Abschlussbericht mit den Ergebnissen ihrer Beratungen vorzulegen.

Für die Kontrolle der Nachrichtendienste des Bundes (Bundesnachrichtendienst,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Militärischer Abschirmdienst) ist nach Art. 45d GG und dem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PKGr) zuständig. Seine Mitglieder werden zu Beginn der Wahlperiode vom Bundestag mit den Stimmen der Mehrheit seiner Mitglieder gewählt. Die Bundesregierung hat die Pflicht, das Gremium umfassend über die allgemeine Tätigkeit der Nachrichtendienste des Bundes und über Vorgänge von besonderer Bedeutung zu unterrichten. Auf Verlangen hat sie auch über sonstige Vorgänge zu berichten. Das Gremium kann unter anderem Akten und Dateien der Nachrichtendienste einsehen sowie deren Mitarbeiter befragen und hat Zutritt zu allen Dienststellen der Nachrichtendienste. Die Bundesregierung kann eine Unterrichtung nur verweigern, wenn dies aus zwingenden Gründen des Nachrichtenzugangs oder aus Gründen des Schutzes von Persönlichkeitsrechten Dritter notwendig oder der Kernbereich der exekutiven Eigenverantwortung betroffen ist. In diesem Fall hat sie dies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gegenüber zu begründen. Zur Wahrnehmung seiner Kontrollaufgaben kann das Gremium im Einzelfall auch einen Sachverständigen mit der Durchführung von Untersuchungen beauftragen.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erstattet dem Bundestag in der Mitte und am Ende jeder Wahlperiode Bericht. Es übt seine Tätigkeit auch nach Ende der Wahlperiode aus, bis der neu gewählte Bundestag wieder ein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eingesetzt hat.

Neben der Kontrolle der Nachrichtendienste obliegen dem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 auch Kontrollaufgaben auf Grund des Gesetzes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es (Artikel 10-Gesetz – G 10). So bestellt es nach Anhörung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Dauer einer Wahlperiode die „G 10-Kommission“, deren Mitglieder nicht Mitglieder des Bundestages sein müssen. Beide Gremien tagen geheim.

Die Nachrichtendienste dürfen von dem Mittel der Post- und Kommunikationskontrolle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die im Artikel 10-Gesetz aufgeführt sind, Gebrauch machen. Jede Maßnahme bedarf grundsätzlich der vorherigen Zustimmung der G 10-Kommission. Diese entscheidet monatlich als unabhängiges und an keine Weisungen gebundenes Organ über die Zulässigkeit und Notwendigkeit der Beschränkungsmaßnahmen. Bei bestimmten Überwachungsmaßnahmen ist die Zustimmung des Parlamentarischen Kontrollgremiums selbst notwendig. Die Bundesregierung muss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halbjährlich über alle Beschränkungsmaßnahmen unterrichten. Dieses berichtet dann jährlich dem Bundestag.

Der G 10-Kommission kommen darüber hinaus Entscheidungskompetenzen für bestimmte Befugnisse der Nachrichtendienste (z. B. Auskunft über Telekommunikationsverbindungs- oder Finanzdaten) zu, die nunmehr den Diensten durch das Gesetz zur Entfristung von Vorschriften zur Terrorismusbekämpfung vom 3. Dezember 2020 unbefristet eingeräumt sind. Auch über diese Maßnahmen ist das Parlamentarische Kontrollgremium in Abständen von höchstens sechs Monaten zu unterrichten.

Eine gleichartige Problematik wie bei den Nachrichtendiensten ergibt sich aus der Befugnis des Zollkriminalamts, zur Verhütung von Straftaten nach dem Außenwirtschaftsgesetz oder dem

Kriegswaffenkontrollgesetz da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 wenn auch durch Anordnung eines Landgerichts – in Einzelfällen aufheben zu können. Um auch hi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sicherzustellen, ist nach § 23c Abs. 8 Zollfahndungsdienstgesetz ein Gremium aus neu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zu bestellen, dem der Bundesminister der Finanzen in Abständen von höchstens sechs Monaten über Eingriffe in das Grundrecht nach Art. 10 GG zu berichten hat.

Zur Bekämpfung der Organisierten Kriminalität wurde durch eine Änderung des Art. 13 GG der Einsatz technischer Mittel zur akustischen Überwachung von Wohnungen zum Zwecke der Strafverfolgung ermöglicht. Die Intensität des Grundrechtseingriffs gebietet eine parlamentarische Kontrolle, die durch das aus neun Mitgliedern des Bundestages bestehende Gremium nach Art. 13 Absatz 6 Grundgesetz auf der Grundlage des von der Bundesregierung jährlich vorzulegenden Berichts über den Einsatz technischer Überwachungsmittel erfolgt.

Art. 94 GG schreibt vor, dass die 16 Richterinnen und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je zur Hälfte von Bundestag und Bundesrat gewählt werden. Die vom Bundestag zu berufenden Richter werden auf Vorschlag des Wahlausschusses durch das Plenum mit verdeckten Stimmkarten ohne Aussprache gewählt. Zum Richter ist gewählt, wer eine Zweidrittel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mindestens die Mehrheit der Stimmen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auf sich vereinigt. Der zur Vorbereitung dieser Wahl eingesetzte Wahlausschuss besteht aus zwölf Abgeordneten; für einen Wahlvorschlag sind mindestens acht Stimmen seiner Mitglieder erforderlich. Dieses Verfahren soll gewährleisten, dass dem Plenum nur Kandidatinnen und Kandidaten zur Wahl vorgelegt werden, die über eine hinreichende Unterstützung – auch aus den Reihen der Opposition – verfügen. Die übrigen acht Richterinnen und Richter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werden vom Plenum des Bundesrates, ebenfalls mit Zweidrittelmehrheit, gewählt.